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동향 2018

일 러 두 기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사회 변화를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는 주로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청(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공동 협력하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은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와 같이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 각 영역은 해당 영역별 ‘주요 동향’과 주요 이슈에 관한 2편의 ‘주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제 선정 시 영역별 전문가(부처, 언론, 학계 등) 의견을 반영하였고, 영역별 집필진(부록 참조)이 작성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목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http://qol.kostat.go.kr>)에 공표시점에 게시합니다.

목 차

□ 요약

□ 주요 영역별 사회동향

1. 인구, 건강, 소득과 소비 영역

가.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1
나. 노인 돌봄의 사회화 동향	3
다.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5
라.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7

2. 가족과 가구, 노동 영역

가.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과 삶의 질	8
나. 성평등, 일-가족 균형 요구의 변화와 육아휴직 활용 동향	10

3. 교육, 주거와 교통, 안전 영역

가. 중·고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참여 실태	12
나.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14
다.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15
라.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	17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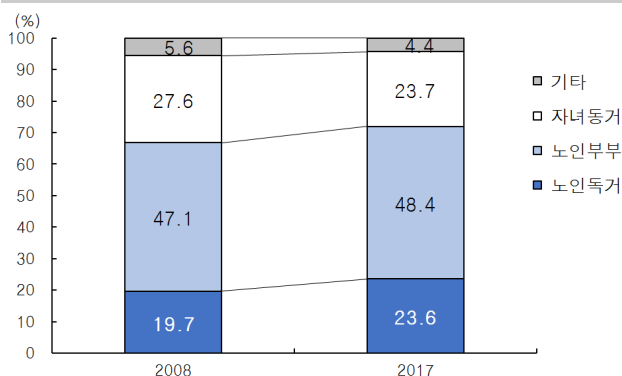
◎ 「한국의 사회동향 2018」 영역별 집필진	18
---------------------------------	----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요약]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화했으며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되어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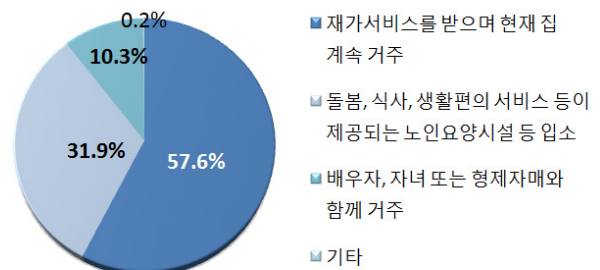
- 거주형태를 보면 노인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p 늘어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3.9%p 감소함. 노인부부가구는 40% 후반을 유지
-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 (57.6%)가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 (31.9%)보다 큼

노년기(65세 이상) 거주형태, 2008, 2017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08, 2017.

65세 이상 노인의 거동 불편시 희망 거주형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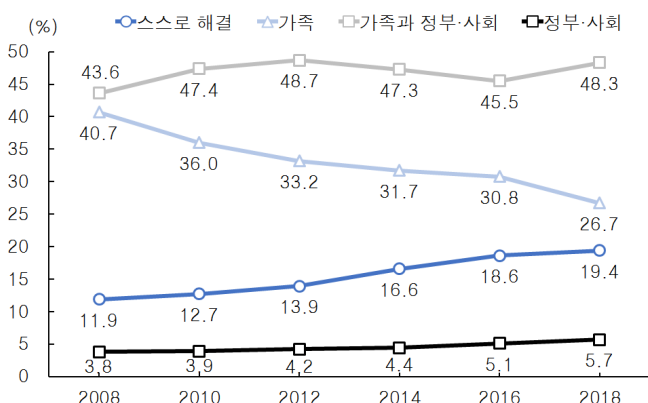


주: “귀하께서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할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 부모부양을 ‘가족’ 이 해야 한다는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졌으며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 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음
- 생활비,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임.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음

부모 노후 돌봄 주체에 대한 인식,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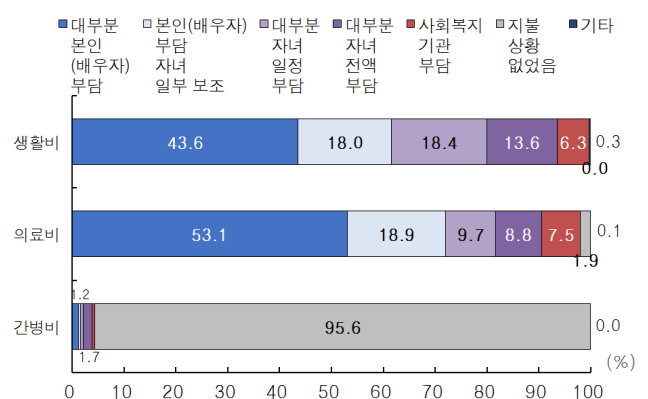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2008, 2010년은 만 15세 이상 가구주임).

2)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주요 지출항목별 노인부양 비용 분담, 2017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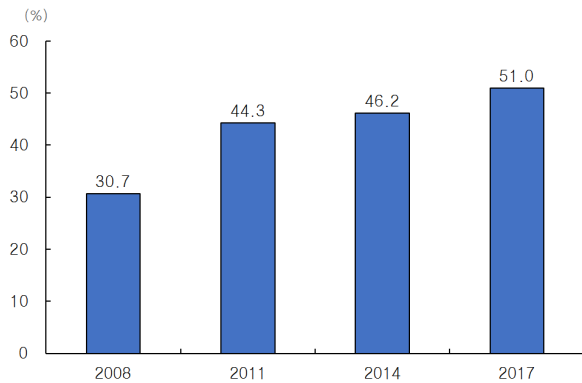
2) “지난 1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3개 이상 만성질환이나 치매 진료자 수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4%p, 관련 인력은 3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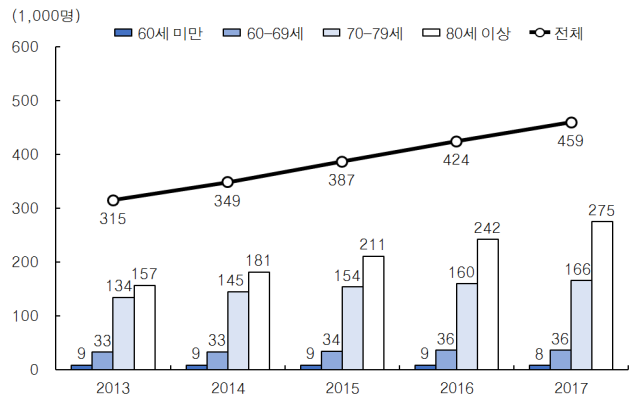
-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51%로 이는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난 것으로 ‘유병장수시대’가 되고 있음
-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함. 2017년 45만 9천명으로 4년 전보다 1.5배 증가함. 특히 80세 이상은 1.8배 증가함

65세 이상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이환율, 2008-2017



주: 조사대상자 중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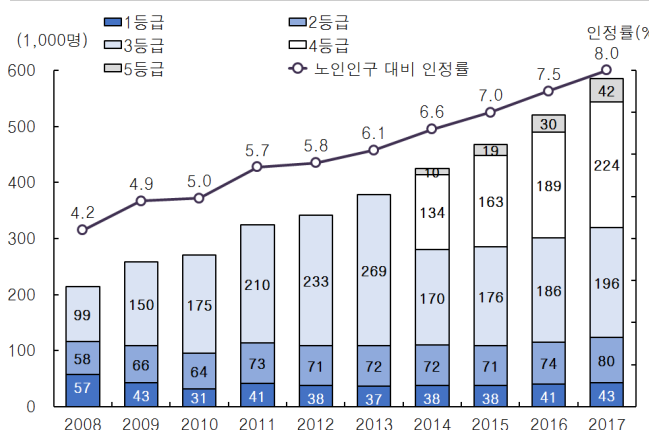
연령별 치매 진료자 수, 2013-2017



주: 연령별 치매 진료자 수는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이며, 진료시점에 따라 중복 집계되어 연령별 진료자 수 합계와 전체 진료자 수가 차이 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2018.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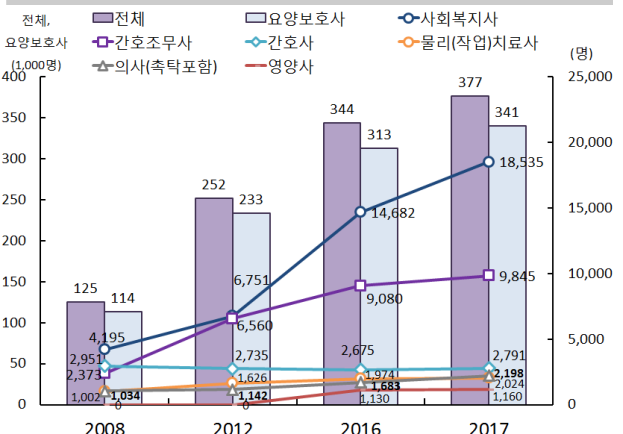
- 2008년 도입되고 201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전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이 2017년 34만 1천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함
 -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크게 증가했으나 간호사는 감소했으며, 의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자 수 및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2008-2017



주: 1) 해당 등급내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임(사망건 제외).
2) 2008~2013년까지는 3등급으로 구분되었다가 2014년부터 4, 5등급 추가됨.
3) 인정률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인정자 수 비율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8.

장기요양인력,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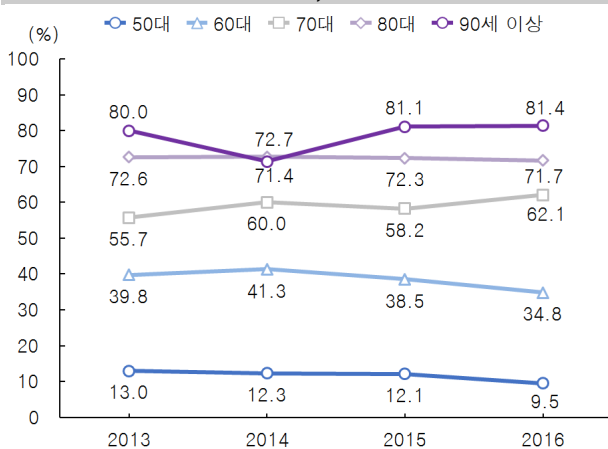


주: 1) 연도말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종사인력임.
2)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조무사가 포함된 통계임.
3) 영양사는 2013년부터 종사인력 직종에 포함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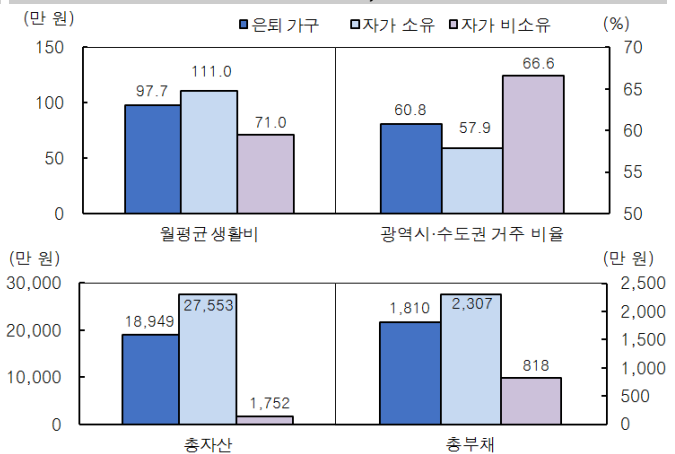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2016년 1,826만 원) 중 이전소득이 64%이며 월평균 생활비의 50%를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함

-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중고령 가구 중 은퇴 가구 비율은 50대에 비하여 60대에 3배 이상 늘어남. 70대에는 50% 이상, 80대에 70% 이상으로 증가함
-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상황을 보면 은퇴 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 월평균 생활비는 97.7만 원으로 자가 소유 가구(111만 원)가 비소유 가구(71만 원)보다 40만 원 더 많았음
- 자가 비소유 가구(67%)가 소유 가구(58%)보다 광역시 및 수도권 거주 비율 높음

중고령가구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은퇴 가구 비율, 201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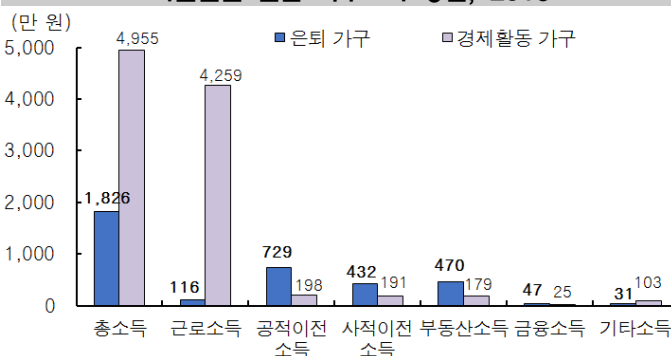
자가 소유 여부별 은퇴 가구의 가구경제상황, 2013-2016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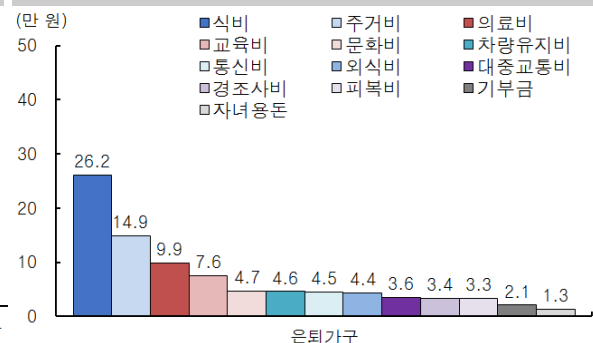
주: 1) 은퇴 가구는 2015년도에 만 50~74세 대상 설문에서 은퇴하였다고 응답하였거나, 매년 고용상태 질문에 '은퇴 후 소일거리함' 응답자이며 생활비 0원 초과인 가구임. 경제활동 하는 자녀 있으면 제외함. 2) 경제상황은 분석대상기간(2013~2016년)의 전체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에 1,826만 원으로 월평균 152만 원이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이 가구 소득의 약 64%를 차지함
- 은퇴한 가구의 2016년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의 37% 수준임
- 식비, 주거비, 의료비가 은퇴 가구의 3대 소비 비목으로 2016년 월평균 생활비 102.7만 원 중 50%를 차지함

은퇴 가구와 경제활동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평균, 2016



은퇴 가구 주요 소비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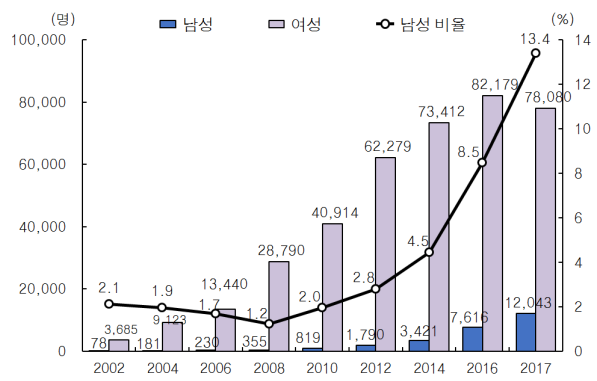


주: 1)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과 정부이전소득 합. 2) 사적이전소득은 친지나 기관 등 정부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지원금. 3) 부동산소득은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집세 포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2016.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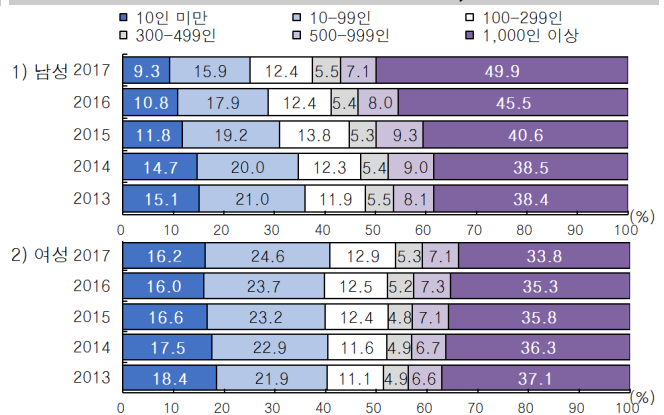
-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휴직급여를 정액 50만원으로, 대상아동 연령을 3년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에는 급여가 정률로, 상한액이 2배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 10년간 여성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함
 - 2014년 ‘아빠의 달’ 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남성 비중은 2008년 1.2%, 2012년 2.8%에서 2014년 4.5%, 2017년 13.4%로 가파르게 상승함
-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함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2002-2017



주: 육아휴직자 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 수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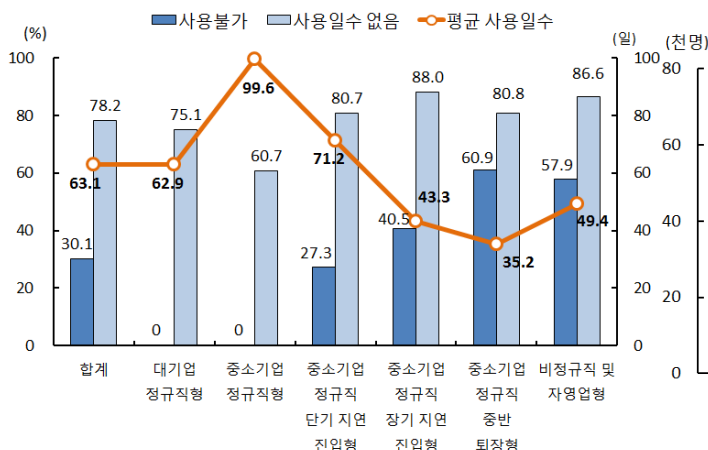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처음 사용자 분포, 2013-2017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비정규직 및 자영업의 58%는 육아휴직이 어려웠음
-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머문 근로자의 비중이 2012년 71.2%에서 2015년 75.5%로 4.3%p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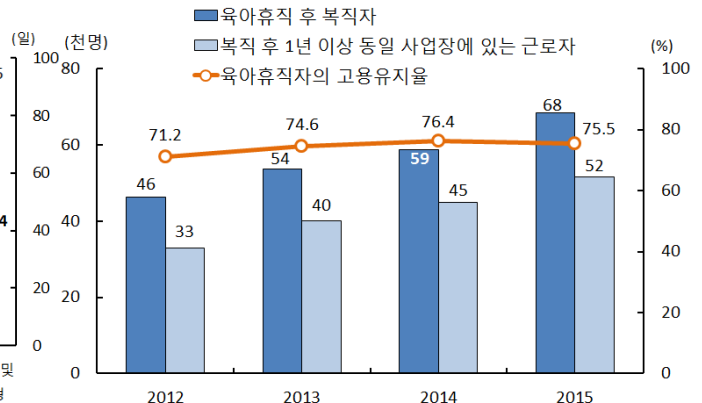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 2015



주: 2003~2005년 대학 졸업 여성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직업력자료」, 원자료, 2015.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2012-2015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의 사회동향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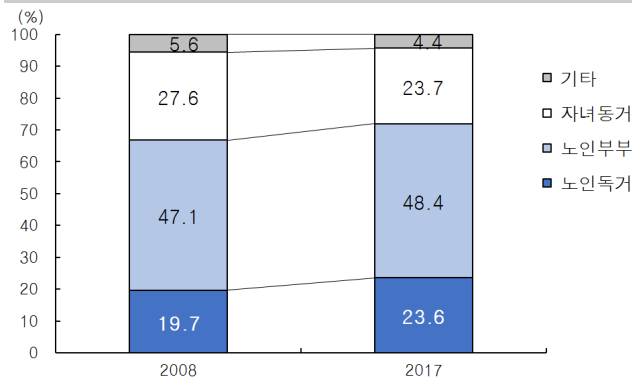
1. 인구, 건강, 소득과 소비 영역

가.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화했으며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되어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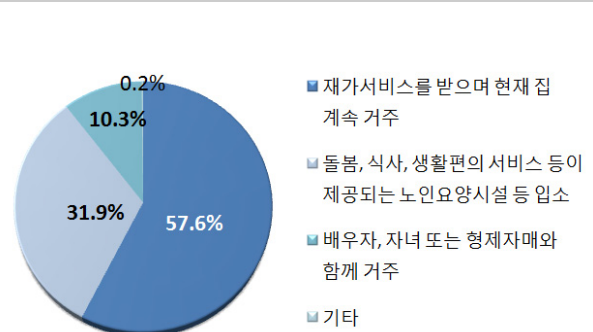
- 거주형태를 보면 노인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p 늘어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3.9%p 감소함. 노인부부가구는 40% 후반을 유지
-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 (57.6%)가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 (31.9%)보다 큼

노년기(65세 이상) 거주형태, 2008, 2017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08, 2017.

65세 이상 노인의 거동 불편시 희망 거주형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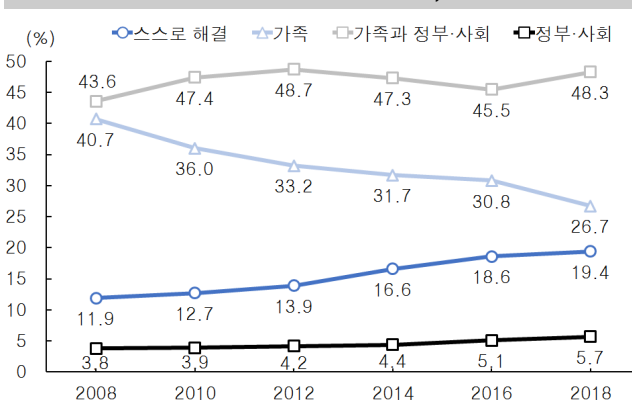


주: “귀하께서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할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 부모부양을 ‘가족’ 이 해야 한다는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졌으며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음
- 생활비,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임.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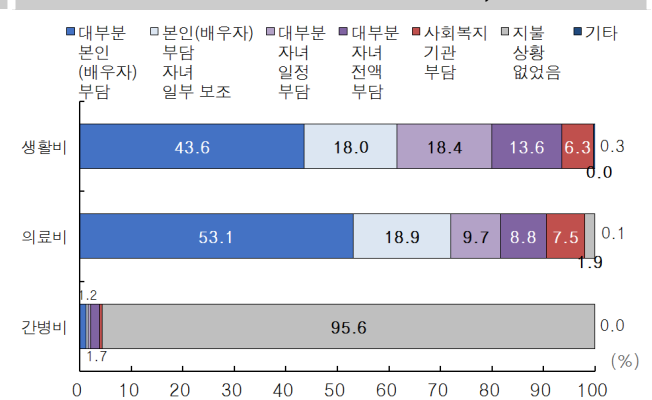
부모 노후 돌봄 주체에 대한 인식, 2008-2018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2008, 2010년은 만 15세 이상 가구주).
2)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주요 지출항목별 노인부양 비용 분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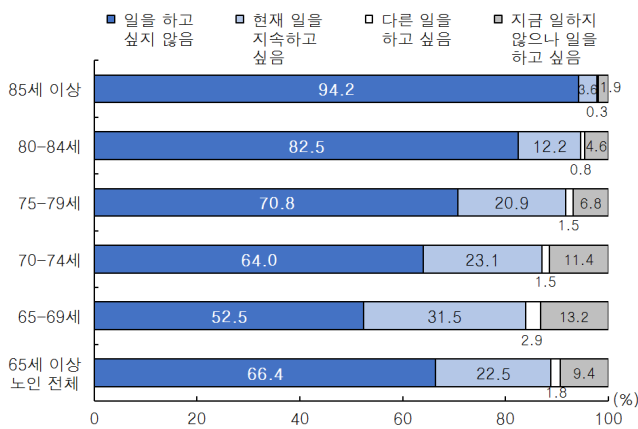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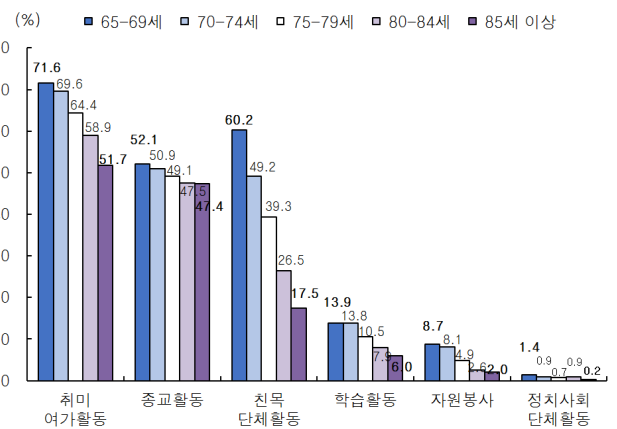
- 노인의 33.6%는 일을 하고 싶어 하며, 22.5%는 현재 일을 유지, 1.8%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함.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고 싶은 비율 큼
- 개인적인 활동인 취미·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대한 선호는 강하지만, 적극적인 참여활동(자원봉사, 정치사회 단체활동) 선호는 매우 낮음. 친목활동 희망은 70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나 종교활동은 연령별 차이가 적음

노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선호도, 2017



주: “귀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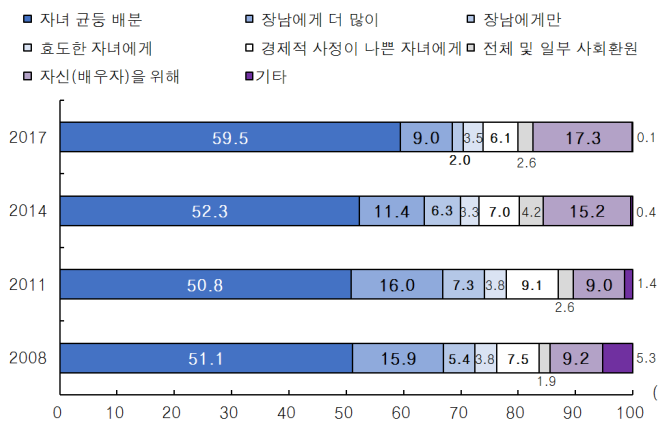
노인의 연령별 사회활동 참여 희망률, 2017



주: 활동 희망률은 각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하고 싶음’ 또는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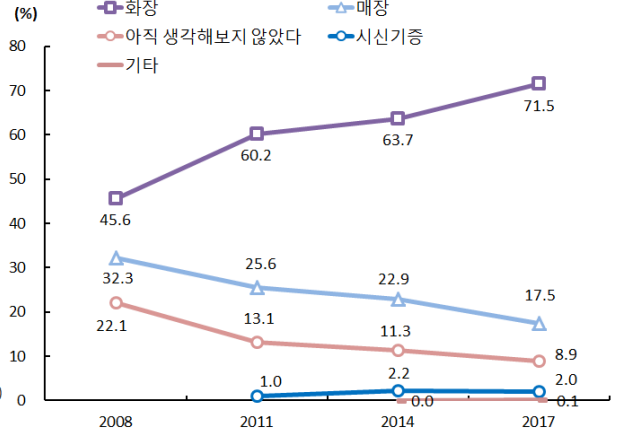
- 상속방법으로 노인의 59.5%가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신(배우자)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7.3%로 10년 전(9.2%)의 약 2배로 증가함
- 화장을 희망하는 노인이 전체의 71.5%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화장이 보편화 되었음을 알 수 있음. 매장은 17.5%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음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는 응답이 8.9%로 10년 전(22.1%)에 비해 13.2%p 감소하여 장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노인 비중이 높아짐

노인의 상속방법에 대한 태도, 2008-2017



주: 상속방법은 “귀하께서 재산 처리 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인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노인의 희망 장례방법,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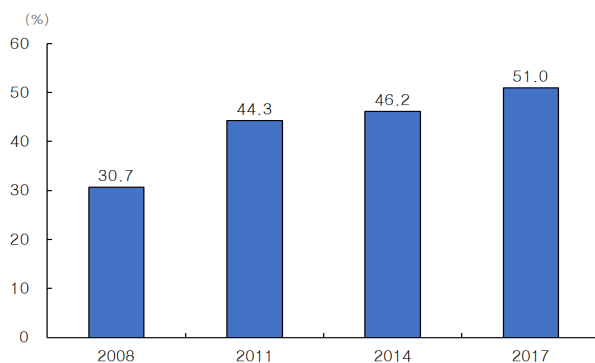
주: 장례방법은 “귀하께서는 본인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나. 노인 돌봄의 사회화 동향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개 이상 만성질환이나 치매 진료자 수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4%p, 관련 인력은 3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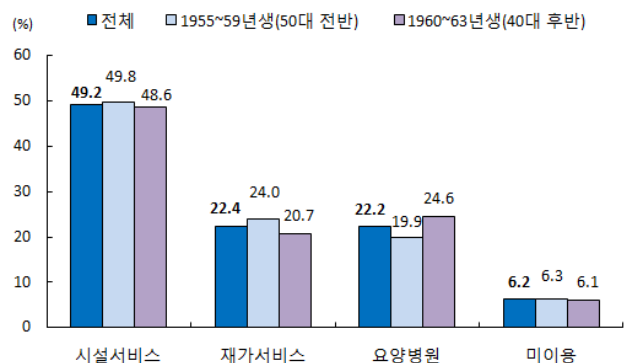
-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51%로 이는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난 것으로 ‘유병장수시대’가 되고 있음
- 1955-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노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할 의향을 나타냄. 이는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과거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결과임

65세 이상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이환율, 2008-2017



주: 조사대상자 중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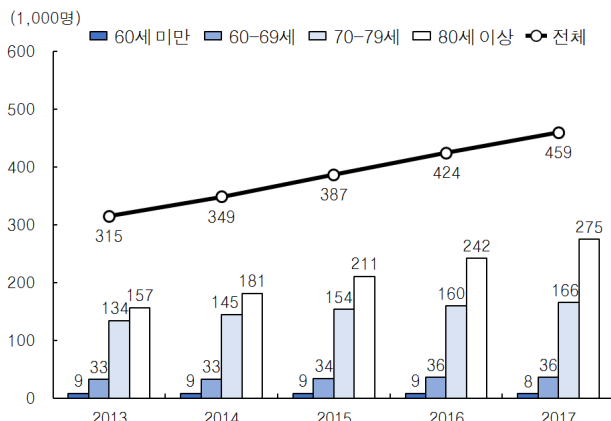
베이비부머의 (배우자)부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2010



주: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41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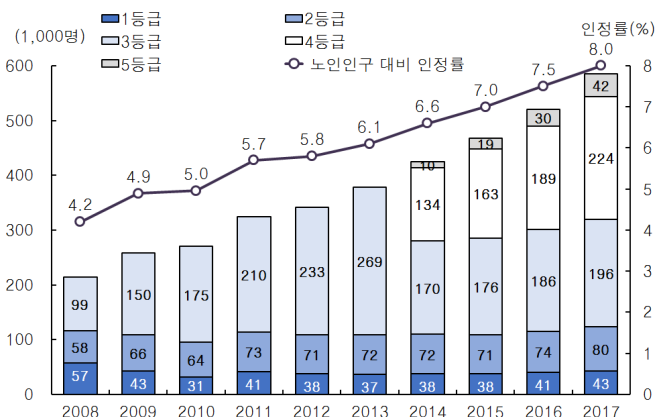
-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함. 2017년 45만 9천명으로 4년전보다 1.5배 증가함. 특히 80세 이상은 1.8배 증가함
- 2008년 도입되고 201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전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함

연령별 치매 진료자 수, 2013-2017



주: 연령별 치매 진료자 수는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이며, 진료시점에 따라 중복 집계되어 연령별 진료자 수 합계와 전체 진료자 수가 차이 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로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2018.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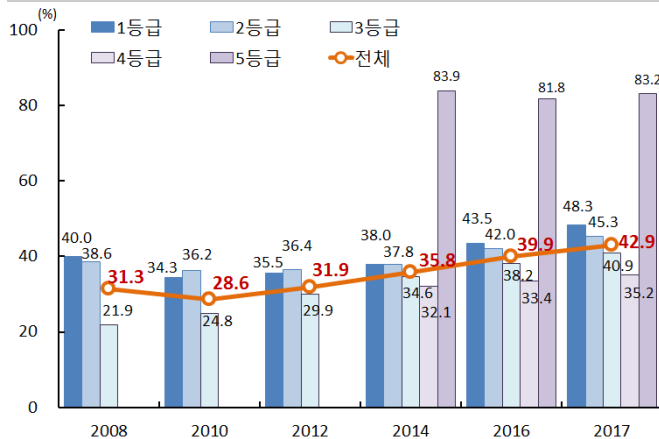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자 수 및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2008-2017



주: 1) 해당 등급내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임(사망건 제외).
2) 2008~2013년까지는 3등급으로 구분되었다가 2014년부터 4, 5등급 추가됨.
3) 인정률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인정자 수 비율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8.

- 장기요양인정자 중 2017년 치매 및 중풍질환자 비중이 42.9%로 보험제도 초기 (31.3%)보다 증가하여 치매질환자에 대한 주요 돌봄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
 - 요양필요도가 높은 1-2등급은 11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양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은 증가하고 있음(5등급은 치매환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6만 4천여 명에서 2017년 20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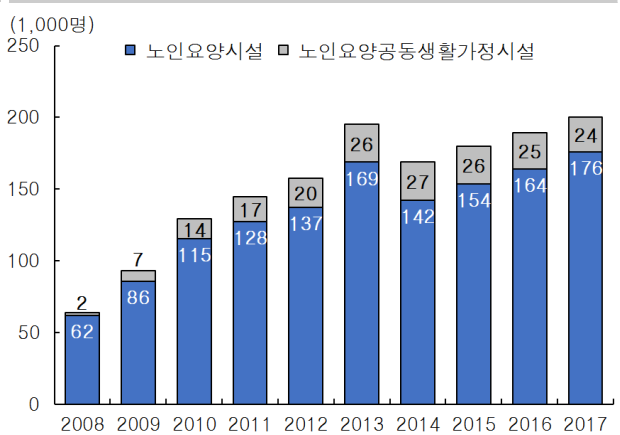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치매질환자 인정률, 2008-2017



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 '치매'와 '치매 및 중풍'에 해당하는 등급별 인정자의 비율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유형별 이용자 수,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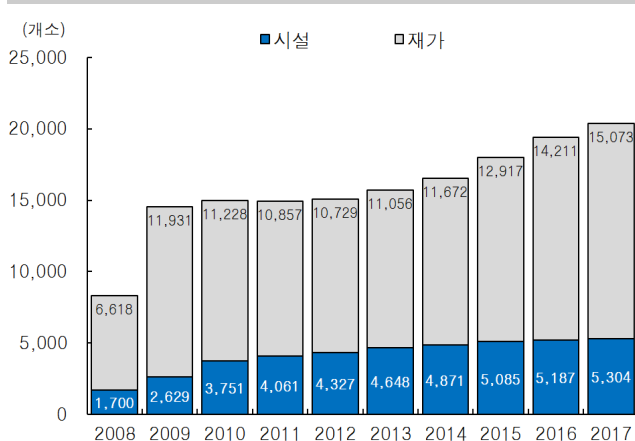


주: 노인요양시설에는 현행법, 구법, 전문요양시설, 단기보호전환 등이 포함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17년 5,30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6,618개소에서 15,073개소로 증가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이 2017년 34만 1천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함
 -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크게 증가했으나 간호사는 감소했으며, 의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시설 및 재가 급여 장기요양기관 수,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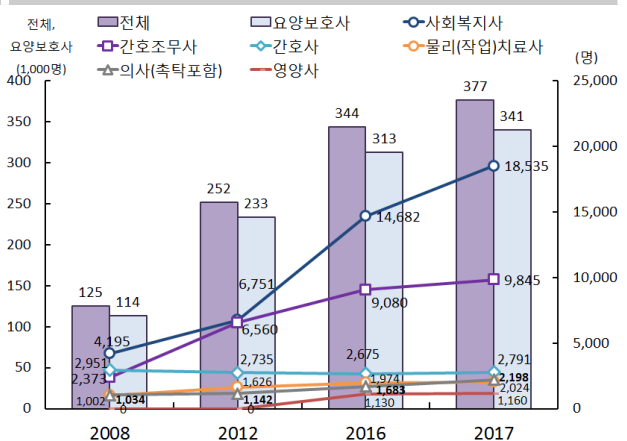


주: 1) 급여유형별 중복이 제거된 값임.

2) 해당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장기요양인력, 2008-2017



주: 1) 연도말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총사원인력임.

2)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조무사가 포함된 통계임.

3) 영양사는 2013년부터 총사원력 직종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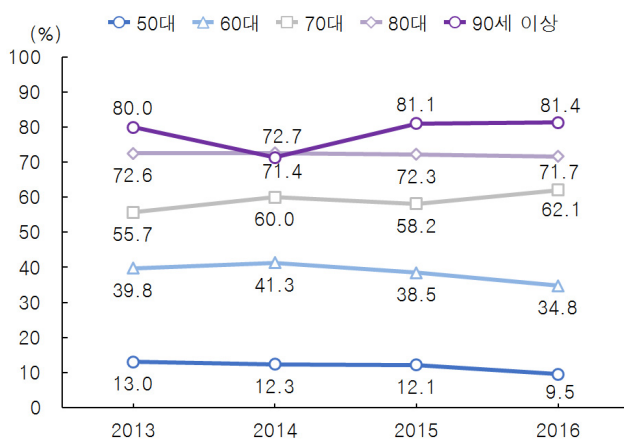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다.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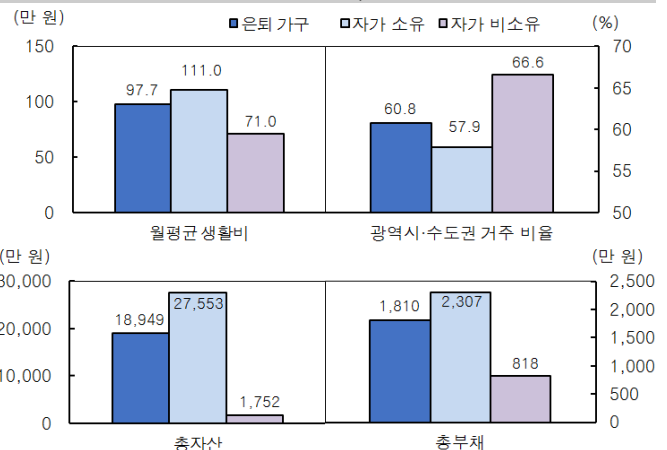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2016년 1,826만원) 중 이전소득이 64%이며 월평균 생활비의 50%를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함

-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중고령 가구 중 은퇴 가구 비율은 50대에 비하여 60대에 3배 이상 늘어남. 70대에는 50% 이상, 80대에 70% 이상으로 증가함
-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상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원으로 자가 소유 가구(111만원)가 비소유 가구(71만원)보다 40만 원 더 많았음
- 자가 비소유 가구(67%)가 소유 가구(58%)보다 광역시 및 수도권 거주 비율 높음

중고령가구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은퇴 가구 비율, 2013-2016



자가 소유 여부별 은퇴 가구의 가구경제상황, 2013-2016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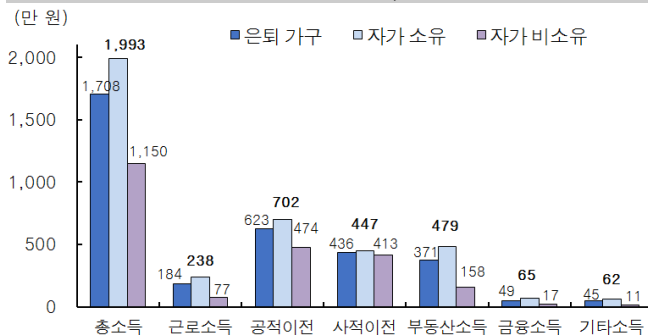


주: 1) 은퇴 가구는 2015년도에 만 50~74세 대상 설문에서 은퇴하였다고 응답하였거나, 매년 고용상태 질문에 '은퇴 후 소일거리함' 응답자이며 생활비 0원 초과인 가구임. 경제활동 하는 자녀 있으면 제외함 2) 경제상황은 분석대상기간(2013~2016년)의 전체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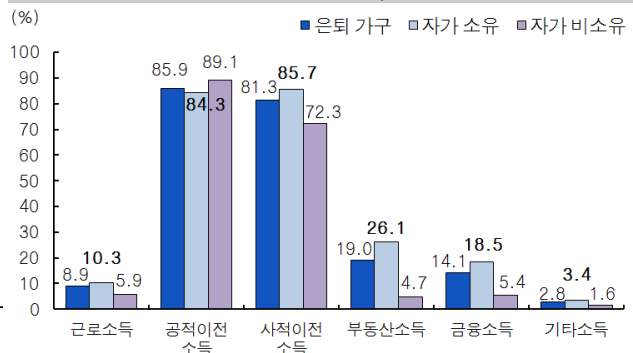
- 80%가 넘는 은퇴 가구에서 이전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약 19% 수준이며, 금융소득은 14%, 근로소득은 9%임

- 자가 소유 가구가 비소유보다 부동산소득이 321만원 많으며 총소득도 1.7배 큼

은퇴 가구의 자가 소유여부 및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평균, 2013-2016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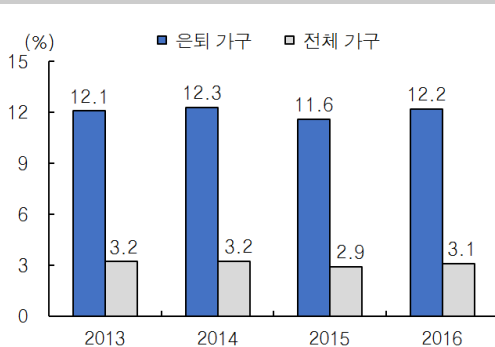
은퇴 가구의 자가 소유여부 및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있는 가구 비율, 2013-2016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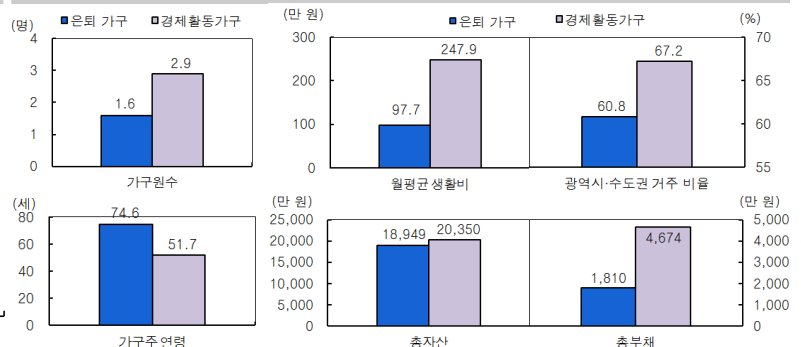
주: 1)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과 정부이전소득 합. 2) 사적이전소득은 친지나 기관 등 정부이전의 대상으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지원금. 3) 부동산소득은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집세 포함. 4) 비율은 전체 은퇴가구 중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 은퇴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 대비 4배 정도 높음
- 4개년 평균 월평균 생활비는 은퇴 가구(98만 원)에 비해 경제활동가구(248만 원)가 약 2.5배 많음. 가구원수는 경제활동가구가 은퇴 가구보다 1.3명 많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201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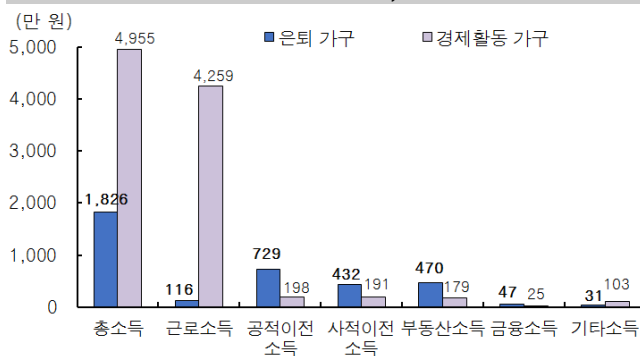
은퇴 가구, 경제활동가구의 가구경제상황, 2013-2016 평균



주: 1) 경제활동가구는 가구주가 15세 이상인 가구 중 은퇴 가구를 제외한 가구임. 2) 경제상황은 분석대상기간(2013-2016년)의 전체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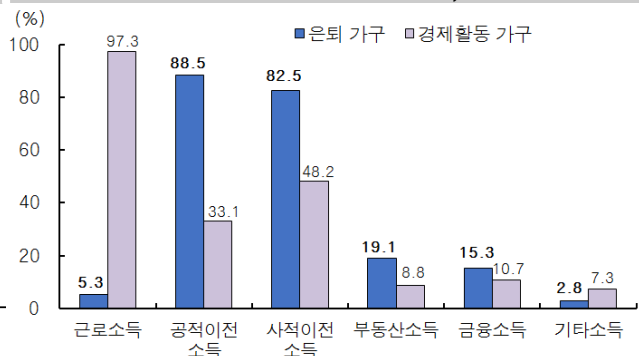
- 2016년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4,955만원)가 은퇴한 가구(1,826만원)보다 2.7배 많았음. 은퇴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구 비율(88.5%, 82.5%)이 높았고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64%를 차지함

은퇴 가구, 경제활동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평균, 2016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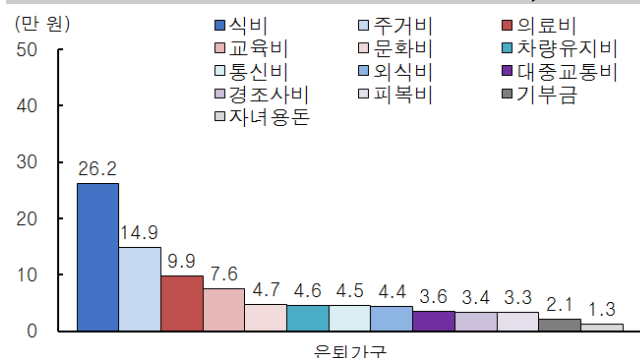
은퇴 가구, 경제활동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있는 가구 비율, 2016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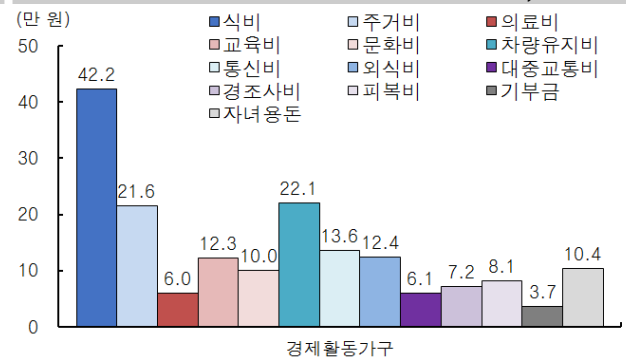
- 2016년 의료비(은퇴 가구: 9만 9천 원, 경제활동가구: 6만 원)를 제외한 모든 소비 비목에서 경제활동가구의 지출금액이 은퇴 가구보다 훨씬 더 많음
- 2016년 식비, 주거비, 의료비가 은퇴 가구의 3대 소비 비목으로 은퇴 가구는 생활비 (102만 7천 원)의 50%, 경제활동가구는 생활비의 28%를 3개 소비 비목에 사용함

은퇴 가구 주요 소비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2016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2016.

경제활동가구 주요 소비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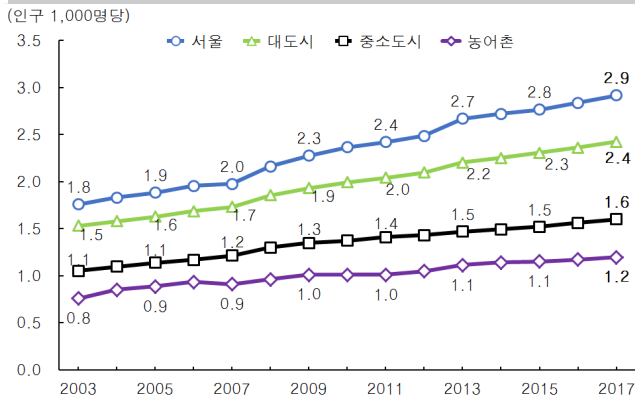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2016.

라.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조병희, 서울대학교)

의료인력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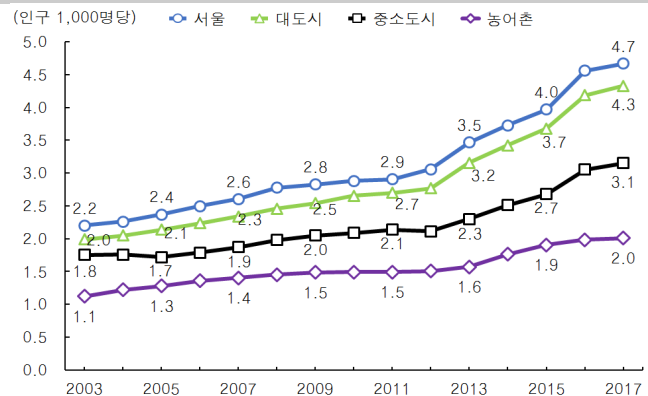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비가 2003년 100:69:50에서 2017년에는 100:66:49로 변함. 대도시 중 특히 서울로 의사가 집중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2017년 3.6명으로 2003년의 1.8명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함.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증가폭이 적음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2003-2017



주: 1) 인구 1,000명당 의사수=(활동의사수÷주민등록인구)×1,000.
 2) 대도시는 서울과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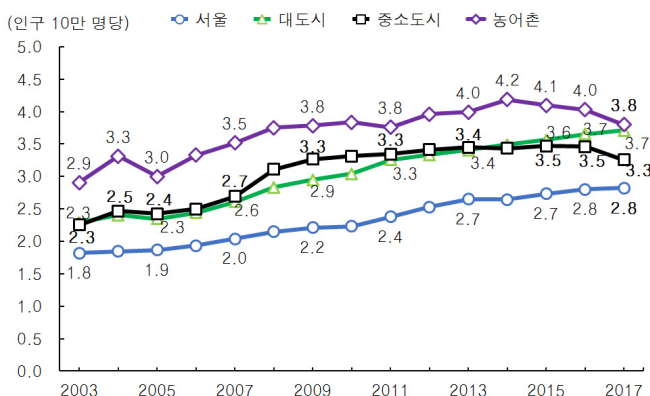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 2003-2017



주: 1)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활동간호사수÷주민등록인구)×1,000.
 2) 대도시는 서울과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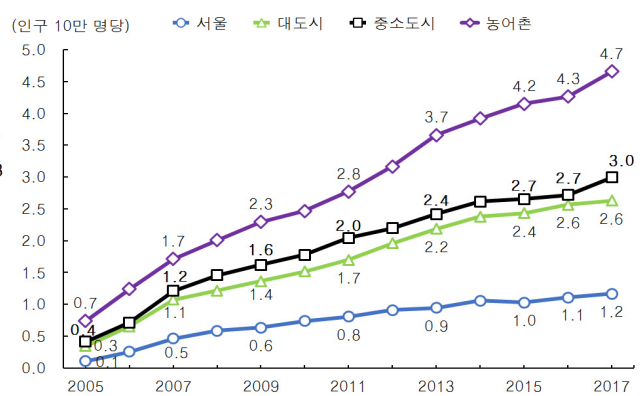
-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함
 - 2013년에서 2017년 대도시: 791→849, 중소도시: 828→819, 농어촌: 156→142개
-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는 2005년에 0.4개이던 것이 2017년 3.0개가 되어 12년 사이에 약 7배로 급격히 증가함
 -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요양병원들이 분포하고 있음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 2003-2017



주: 1) 인구 10만 명당 병원수=(병원수÷주민등록인구)×100,000.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이 포함됨(단, 2003, 2004년은 요양병원 포함).
 3) 대도시는 서울과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 2005-2017



주: 1)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수=(요양병원수÷주민등록인구)×100,000.
 2) 대도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 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2. 가족과 가구, 노동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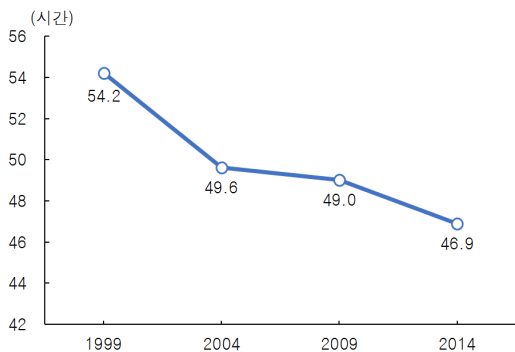
가.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과 삶의 질

(차승은, 수원대학교, 한경혜, 서울대학교)

유배우 취업자 중 어린 자녀나 노인을 돌보는 맞벌이 부부는 만성적인 시간 부족을 겪고 있으며, 시간부족을 자주 경험한 경우 더 피곤함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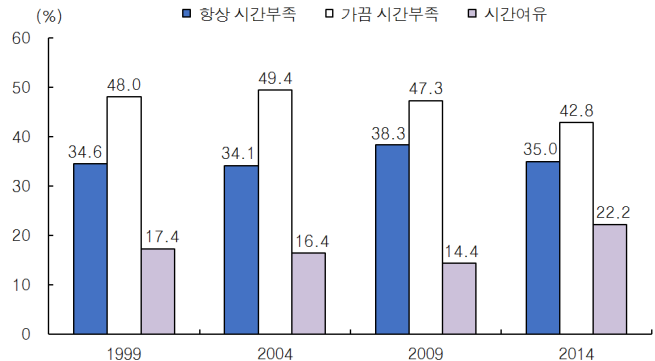
- 2004년 이후 주5일제 근무 정착 등 근무시간 조정 및 시간 융통성을 부여하는 근무환경 변화와 함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꾸준히 감소해 왔음
-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시간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집단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집단 비율은 1999-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에 그 비중이 약간 줄었음

주당 평균 근무시간, 1999-201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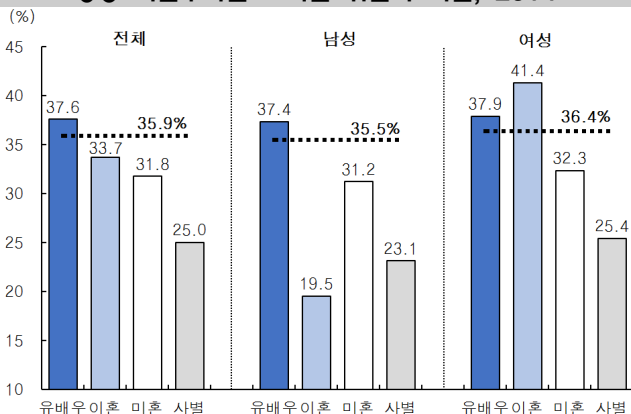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 1999-201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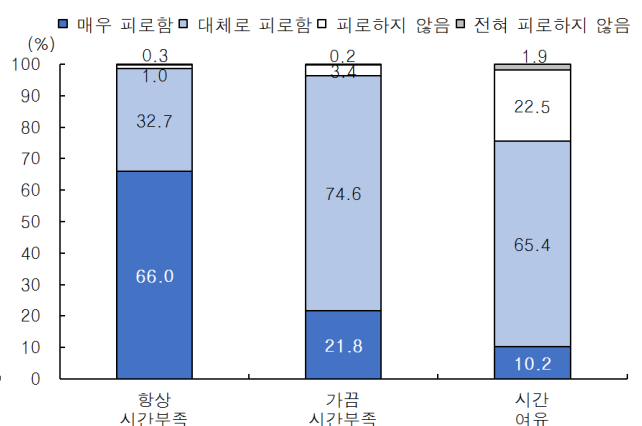
-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집단의 ‘항상 시간부족’ 경험 비율이 가장 높으나, 성별로는 이혼한 여성이 41.4%, 남성이 19.5%로 이혼한 집단 내 차이가 가장 큼
- 시간부족을 ‘항상’ 또는 ‘가끔’ 지각하는 사람들은 일과가 끝난 후에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98.7%, 96.4%), 평소에 시간 여유가 있다는 사람들은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24.4%)이 상대적으로 큼

성 및 혼인상태별
항상 시간부족을 느끼는 취업자 비율, 201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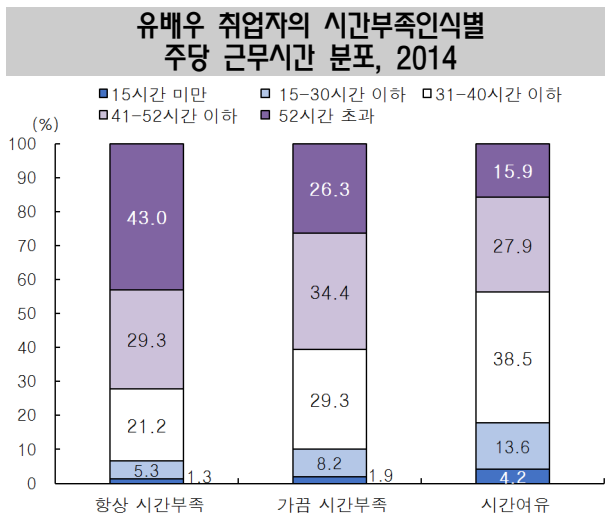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과 일상피로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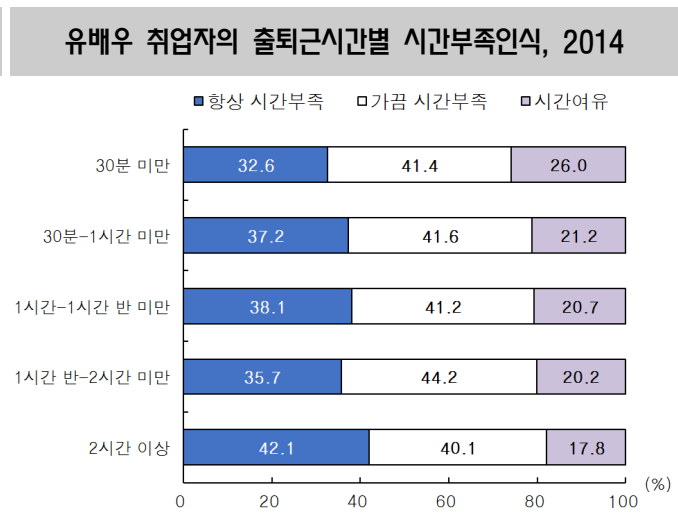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 평소에 시간부족을 항상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52시간 초과로 일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으며, 시간여유가 있다는 사람들은 40시간 이하의 비중이 큼

○ 출퇴근시간이 2시간 이상인 직장인들은 시간부족을 항상 느끼는 비율이 42.1%로 큰 반면에, 30분 미만인 경우 32.6%로 상대적으로 작음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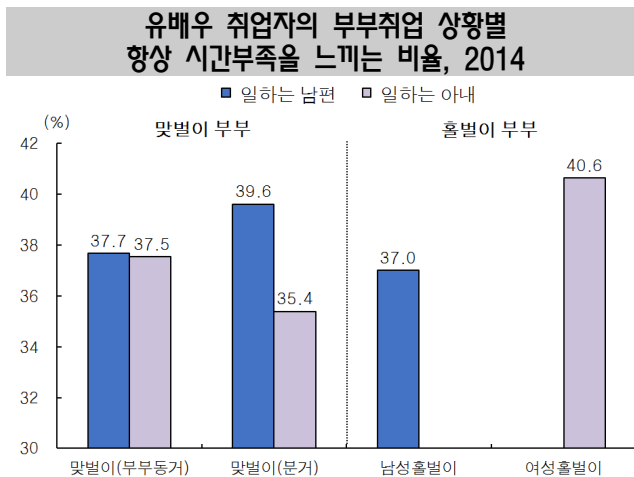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 여성 홀벌이 부부의 아내가 네 개 유형의 부부 가운데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며, 동거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시간부족감 크게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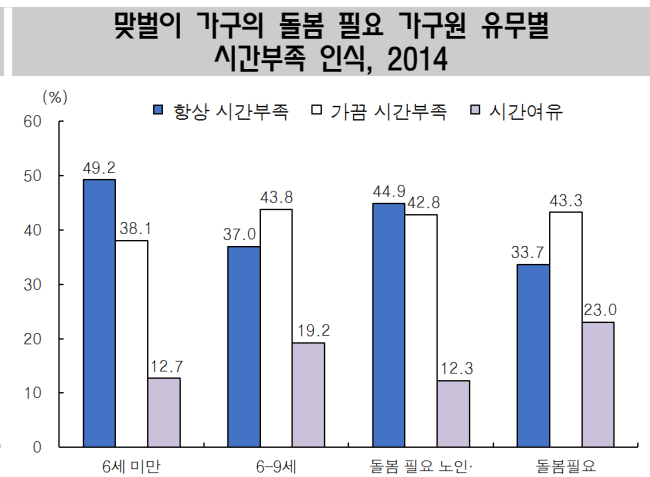
○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항상 시간부족’ 을 느끼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맞벌이 부부의 시간부족감을 초래하는 요인일 수 있음

- 6-9세 자녀가 있는 경우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높음. 만성적인 시간부족은 해소되지만, 여전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은 유지됨

- 돌봄 필요 노인 또는 장애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항상 시간부족’ 비율이 높음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주: 노인 또는 장애 가구원은 돌봄 필요 사유가 있는 치매 또는 장애 가구원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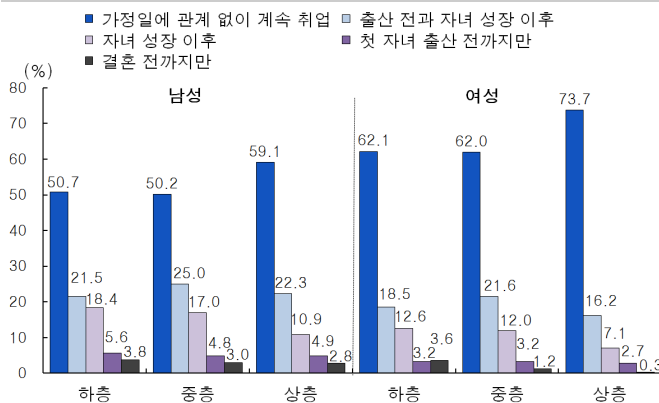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나. 성평등, 일-가족 균형 요구의 변화와 육아휴직 활용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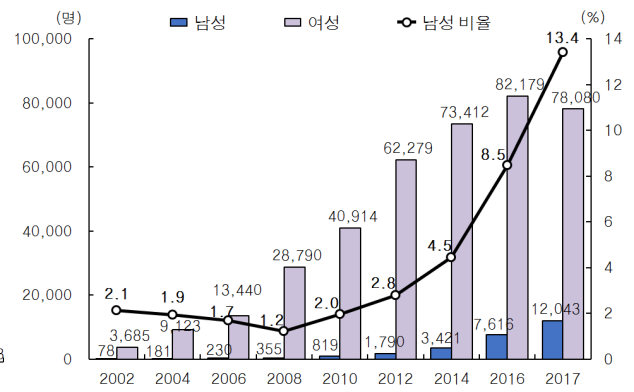
- 만 20~39세 청년층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全)주기에 걸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소득계층 상층과 여성이 더 강함
-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휴직급여를 정액 50만 원으로, 대상아동 연령을 3년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에는 급여가 정률로, 상한액이 2배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 10년간 여성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함
 - 2014년 ‘아빠의 달’ 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남성 비중은 2008년 1.2%, 2012년 2.8%에서 2014년 4.5%, 2017년 13.4%로 가파르게 상승함

청년층의 소득계층별 여성 취업 적정 시기에 대한 인식, 2017



주: 1) 만 20~39세 응답자 대상. 2) 소득수준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은 '하층', 300~600만 원 미만은 '중층', 600만 원 이상은 '상층' 분류.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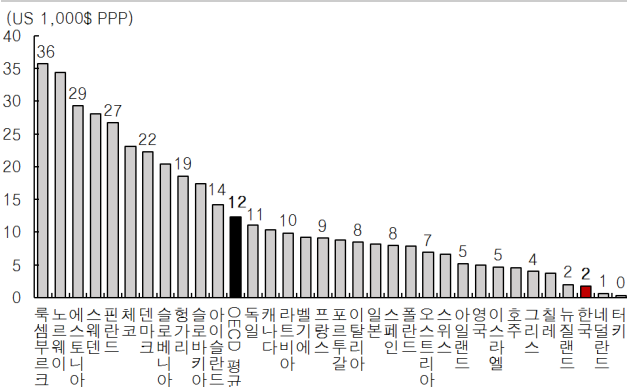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2002-2017



주: 육아휴직자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 수를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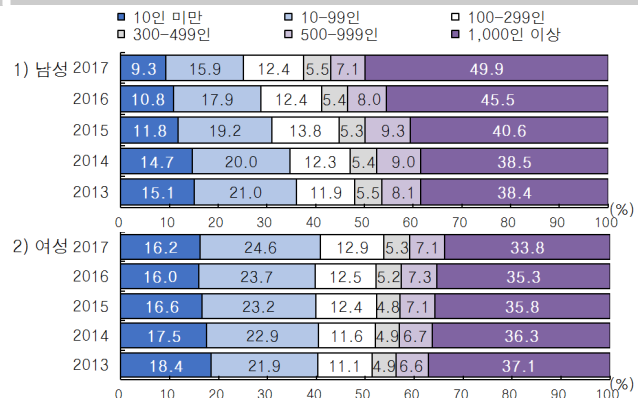
- 자녀 한 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1,723\$로 OECD 국가 평균(12,31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함

OECD 주요국가의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공공지출액, 2013



주: 공공지출액은 자녀 1명당 지출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총 급여액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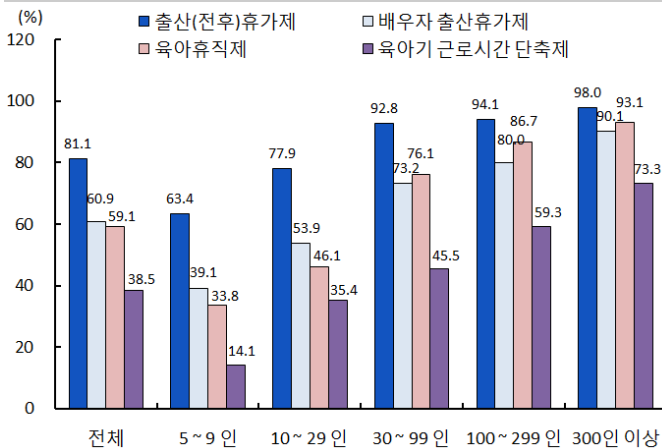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처음 사용자 분포, 2013-2017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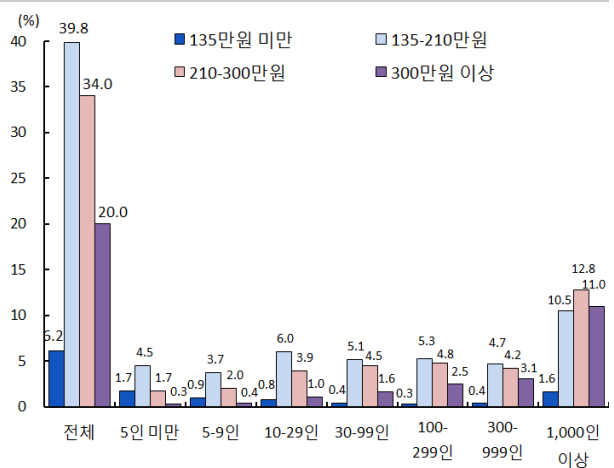
-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인데, 5-9인의 소규모 기업은 33.8%에 불과함.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함
- 300만 원 이상의 상대적 고임금군이 휴직자의 약 20%, 210~300만 원인 중간 정도의 임금을 버는 근로자가 34%, 135만 원 미만 저임금군은 6.2%임. 같은 규모라도 소득 안정권에 있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기업규모별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현황, 2017



출처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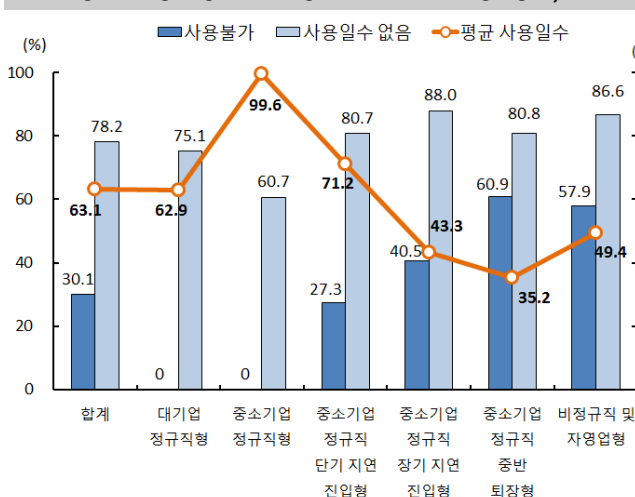
기업규모 및 소득수준별 육아휴직자 분포, 2017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2017.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비정규직 및 자영업의 58%는 육아휴직이 어려웠음.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중소기업 정규직을 유지한 경우 사용 경험 비중이 높고, 평균 사용일수가 길었음
-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머문 근로자의 비중이 2012년 71.2%에서 2015년 75.5%로 4.3%p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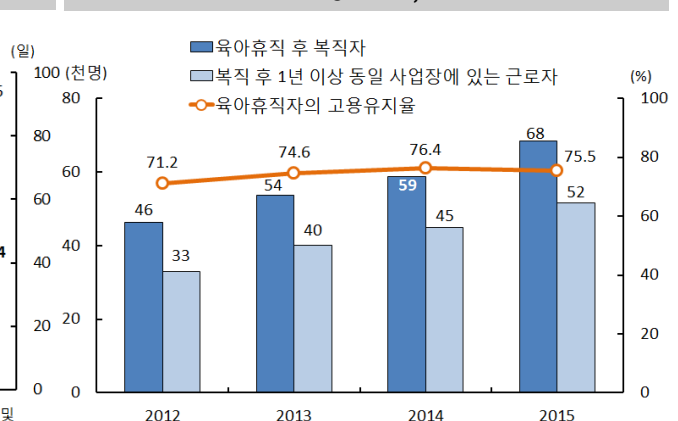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 2015



주: 2003~2005년 대학 졸업 여성을 대상으로 함.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직업력자료」, 원자료, 2015.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2012-2015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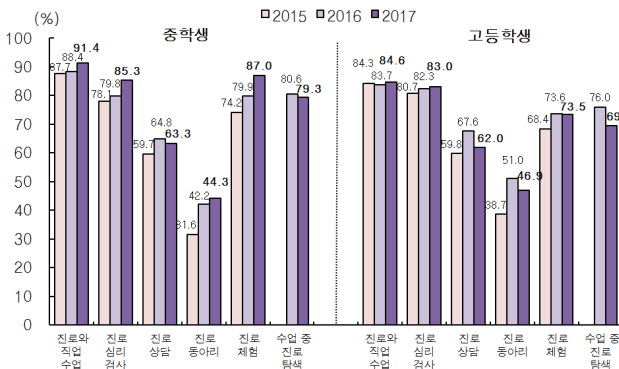
3. 교육, 주거와 교통, 안전 영역

가. 중·고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참여 실태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업 중심의 진로활동보다는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진로 체험 중에서도 현장직업체험과 현장견학의 참여희망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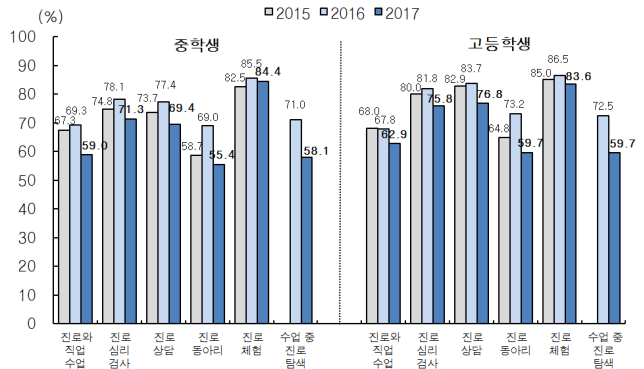
- 진로활동 참여는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가세를 나타냄
- 진로활동 참여 희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진로체험이 높음. 이는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진로체험의 활용 가치가 높아진 것과 관련됨. 반면 참여율이 높았던 수업 중심의 진로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호도와 수요가 낮음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 2015-2017



주: 1) “학생은 학교에서 다음 진로활동을 해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수업 중 진로탐색은 2016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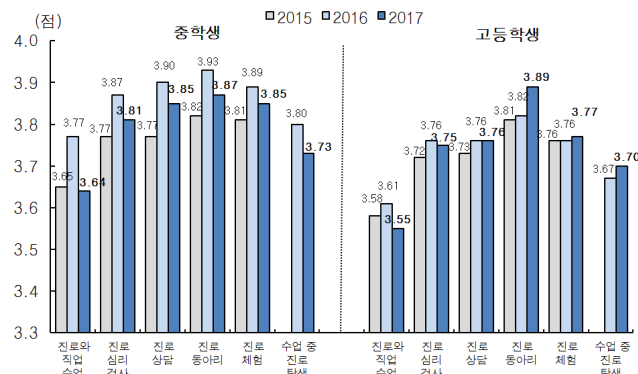
학교진로활동 유형별 참여희망 비율, 2015-2017



주: 1) 세부 유형별 “학생은 앞으로 학교에서 다음 진로활동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수업 중 진로탐색은 2016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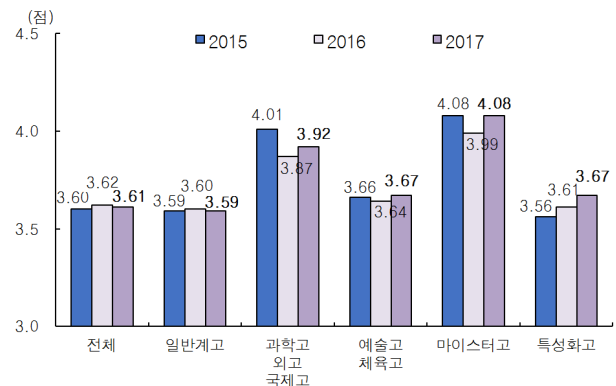
- 진로활동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이었는데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으며 중, 고등학생 모두 진로동아리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진로체험, 진로상담이 그 다음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과학고·외고·국제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았음

학교 진로활동 유형별 만족도, 2015-2017



주: 1) 해당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응답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수업 중 진로탐색’은 2016년부터 조사에 포함되었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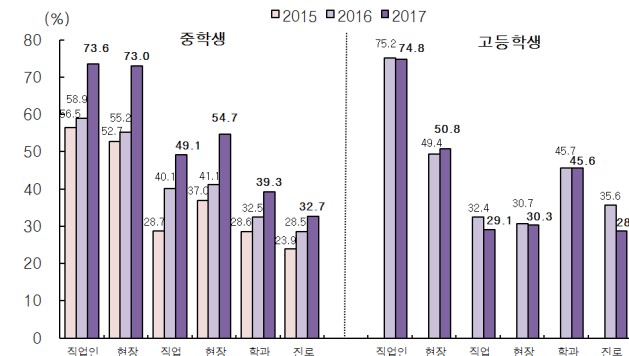
고교 계열별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15-2017



주: “학교 진로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 진로체험 세부 항목별로는 중, 고등학생 모두 직업인 특강·멘토(강연형·대화형)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현장견학이 그 뒤를 이음
 - 직업인의 강연이나 특강이 여전히 가장 일반화 된 형태로 고등학생의 경우 그 집중 현상이 중학생보다 심했음
- 현장직업체험과 현장견학에 대한 참여희망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은 진로캠프가, 고등학생은 학과체험이 3위로 나타남
 - 고등학교에서 학과체험의 참여율이나 참여희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과 선택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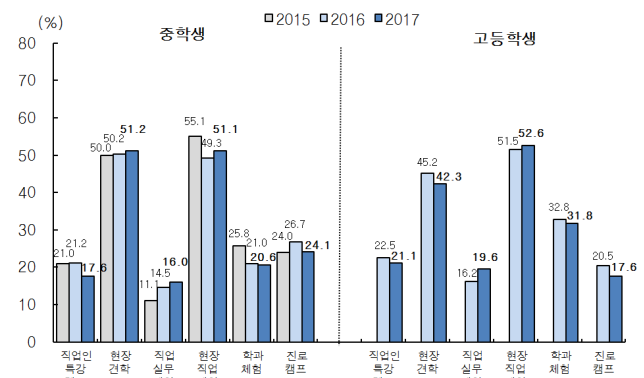
학교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율, 2015-2017



주: 1) “학생은 지난 1년간(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진로체험에 참여해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고등학생은 2015년에 해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학교 진로체험 참여희망비율, 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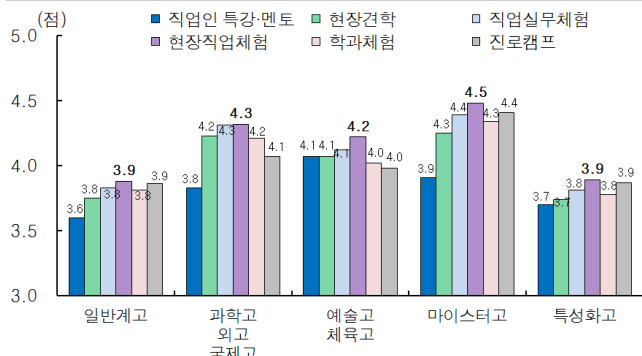


주: 1) “학생이 앞으로 더 경험해보고 싶은 학교 진로체험활동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며, 2개까지 중복 응답이 허용되었음.
 2) 고등학생은 2015년에 해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 주관적 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느끼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과학고·외고·국제고 및 마이스터고, 예술고·체육고가 높음
 - 현장직업체험의 '17년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느끼는 도움 정도는 4.5점으로 무척 높는데 이는 마이스터고가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직업교육기관이기 때문임
- 불만족 이유로는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중등 38.8%, 고등 42.5%), ‘내가 원하는 체험처가 아니라서’ (중등 23.4%, 고등 23.9%), ‘체험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중등 19.6%, 고등 14.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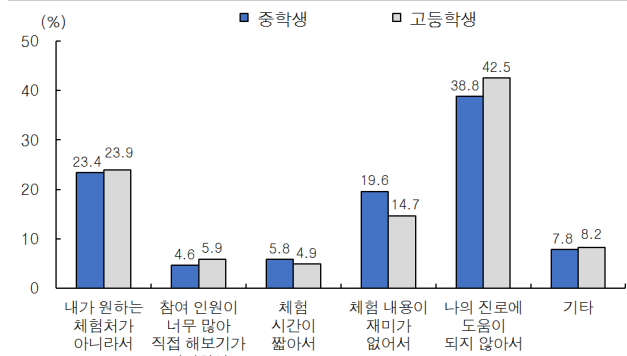
고교 계열별 학교 진로체험 체감효과, 2017



주: 각각의 체험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해 본 활동이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2017.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불만족 이유, 2017



주: 학교에서 경험한 진로체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활동에 만족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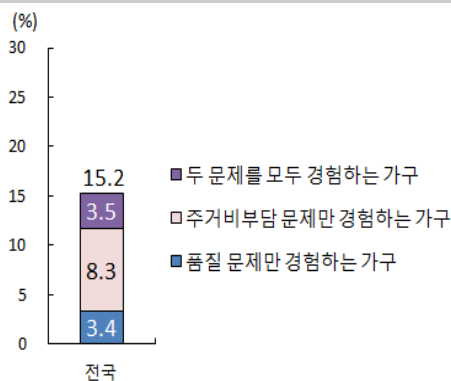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2017.

나.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김준형, 명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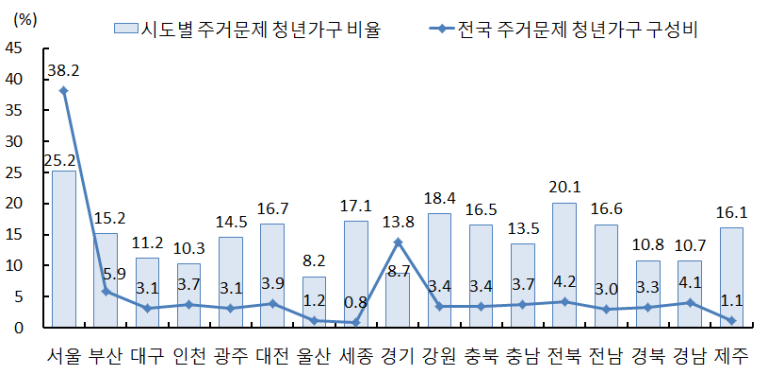
주거문제 경험 청년가구는 전체 청년가구의 15.2%로 주거비부담 문제가 품질 문제에 비해 많고, 지역은 서울(38%), 가구구성은 남성 1인 가구(55%)에 편중

-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는 약 69만 가구로 전체 청년가구의 15.2%임.
이 중 주거비부담 문제 가구가 품질 문제 가구에 비해 2배 정도 많음
- 주거문제 가구는 서울 38.2%, 경기 13.8%, 인천 3.7%로 수도권에 약 56%가 집중됨. 특히 서울이 25.2%이고, 전북(20.1%), 강원(18.4%), 세종(17.1%) 등도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의 비율이 높은 편임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규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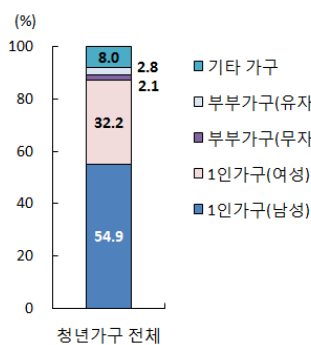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시도별 분포, 2017



주: 1) 전체 청년(주거정책이 설정한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가구 중 해당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의 비율, 전체 청년가구의 규모는 454만 2,068가구임.
2) 주거문제는 품질 문제(면적기준: 국토해양부, 2011년의 최저주거기준인 가구원수별 최소면적 미달 가구, 시설기준: 상수도나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거나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단독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주거비부담 문제(지역 내 임차가구의 중위임대료에 대해 가구의 순자산에 이용하여 판별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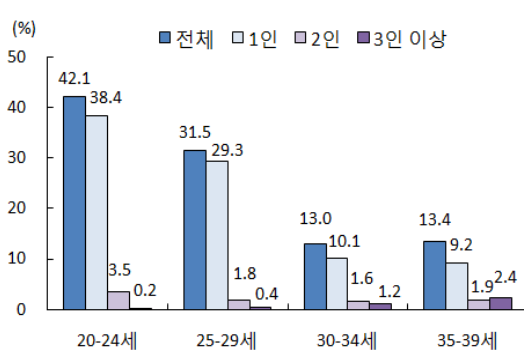
- 주거문제 가구는 남성 1인 가구(54.9%)와 여성 1인 가구(32.2%)가 많고, 부부로 구성되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은 매우 낮음
- 연령대는 20대 초반, 가구원수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주거문제 경험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음
 - 주거문제 가구의 평균 소득은 1,318만 원, 중위 값은 1,080만 원이며 연 2,5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89%, 문제없는 가구 중 2,500만 원을 넘는 비중은 78%임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가구구성, 2017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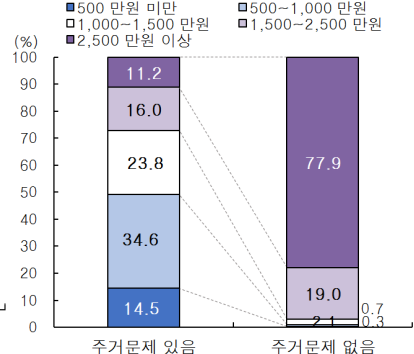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연령 및 가구원수 분포, 2017



주: 전체 주거문제 청년가구 중 해당 연령 및 가구원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7.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소득 분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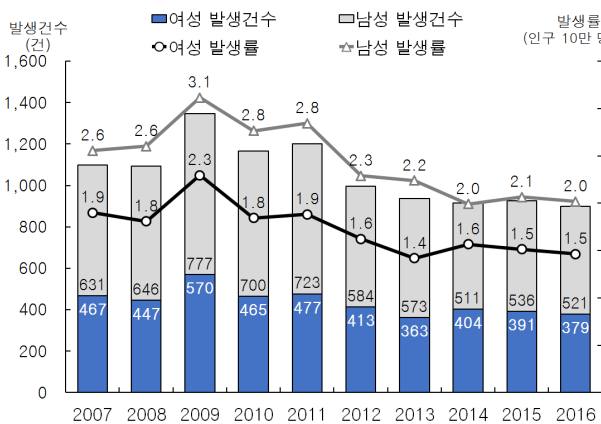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7.

다.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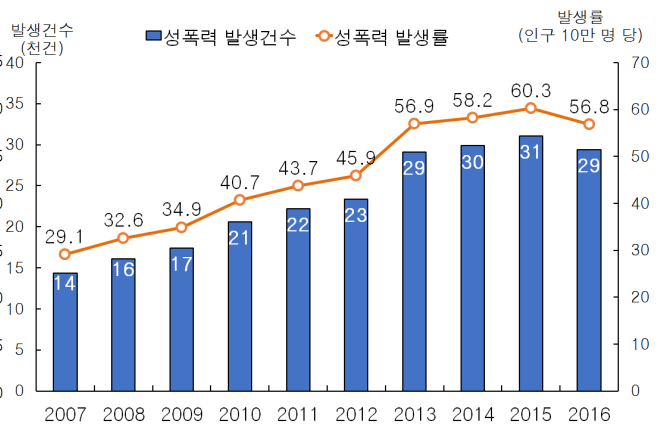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범죄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나 데이트폭력, 성희롱 등은 증가

-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젠더폭력인 여성 대상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467건에서 2009년 570건까지 증가 후 감소추세로 2016년 현재 379건임
 - 여성 살해 사건은 하루에 1.04건, 남성은 1.43건 발생
-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2만 9,357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56.8건, 하루에 80.4건, 시간당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함

살해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07-2016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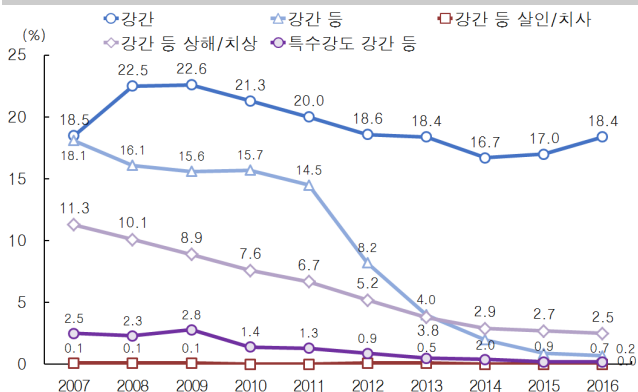
주: 1)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외의 미수, 예비, 음모, 방조도 포함.
 2) 여성살해 발생률=(여성살해 발생건수÷여성 주민등록인구수)×100,000.
 3) 남성살해 발생률=(남성살해 발생건수÷남성 주민등록인구수)×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주: 1) 강간(간음포함), 강제추행, 강간 등(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 추행.
 2) 발생률=(발생건수÷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의 구성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구성비는 증가 추세임
 - 최근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강제추행이나, 스마트폰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증가에 의한 것임

성폭력 범죄 유형별 구성비,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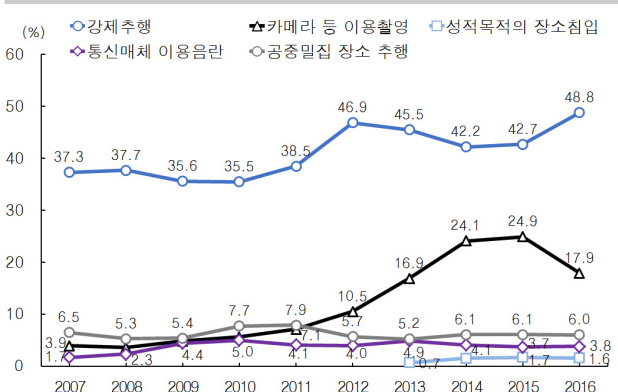
1) 강간 등 성폭력범죄



주: 강간 등은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성폭력 범죄 유형별 구성비,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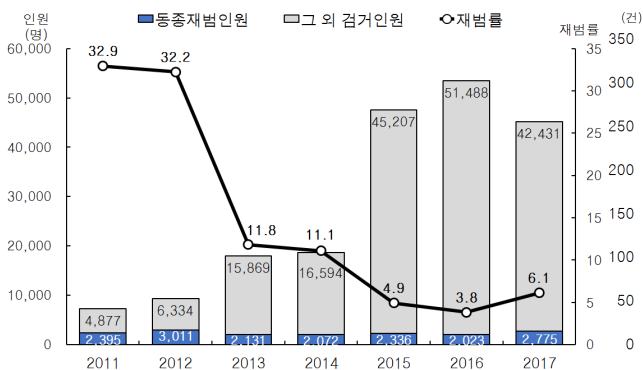
2) 강간 외 성폭력범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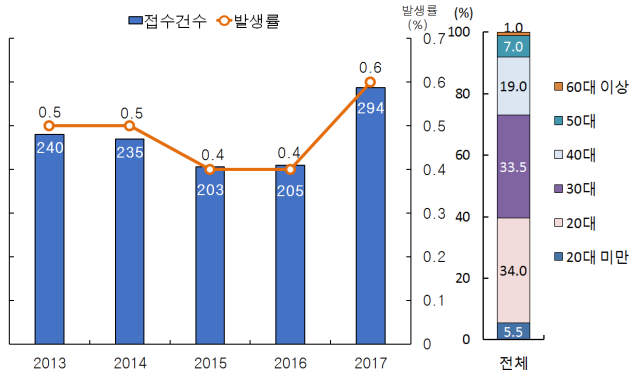
- 가정폭력범죄자 검거인원은 2011년 7,272명에서, 2016년 5만 3,511명으로 지난 7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7년에는 조금 감소한 4만 5,206명임
 - 동종재범자 비율은 2011-2012년 32%에서, 2015-2017년 약 5%대로 감소함. 7년 동안 검거인원은 약 6배 증가한 반면, 동종재범자 수는 2천 명대를 유지함
- 성희롱 접수건수는 2013년 240건에서 2015년, 2016년 203건과 205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294건으로 증가함
 - 2017년 접수된 성희롱 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86.1%이고 남성은 13.9%임. 20대와 30대가 34.0%와 33.5%로 가장 많았고, 40대(19.0%)가 그 다음임

가정폭력사범 검거인원과 동종재범률, 2011-2017



주: 1) 검거인원=동종재범인원+그 외 검거인원.
2) 동종재범률=(동종재범인원÷검거인원)×100.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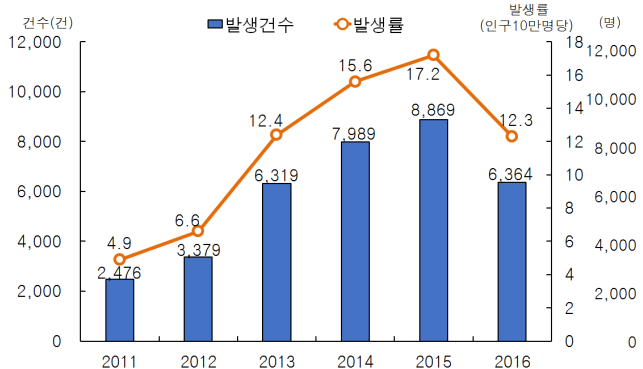
성희롱 접수건수 및 발생률, 2013-2017



주: 1) 접수건수는 검찰, 경찰, 구급시설, 군대,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법인, 개인회사, 단체, 사인(개인), 요양시설, 기타 등 기관별 성희롱 진정 접수건을 모두 합한 수치임. 2) 발생률=(접수건수÷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000.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201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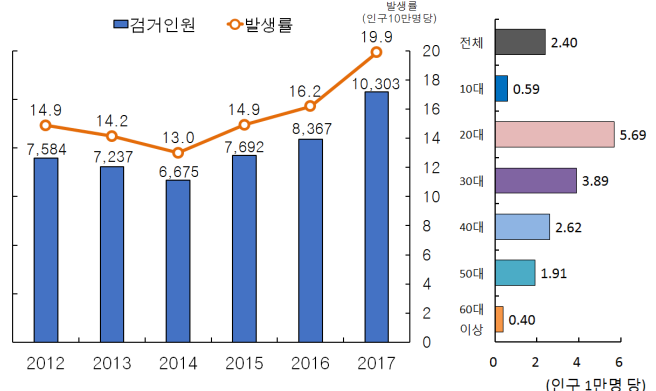
-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까지 늘어나다가 2016년에 다소 감소함
 - 2017년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협의체가 구축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어 다시 증가 예상
- 데이트폭력은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10% 이상씩 증가했으며 20대가 가장 많음
 - 2016년 2월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 팀’ 구성, ‘연인 간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크게 증가함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11-2016



주: 1)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건수를 합한 수치임.
2) 발생률=(발생건수÷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및 발생률, 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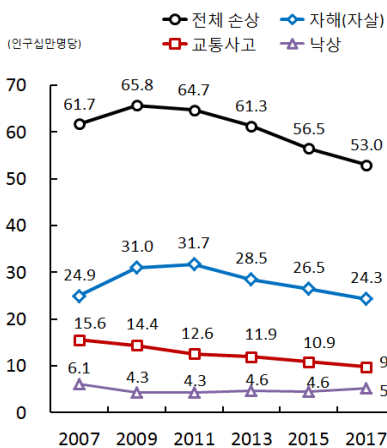
주: 1) 발생률=(검거인원÷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000. 3) 경찰청 내부자료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이용하여 산출.
출처: (재)경기도가족연구원, 「경기도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 2018.

라.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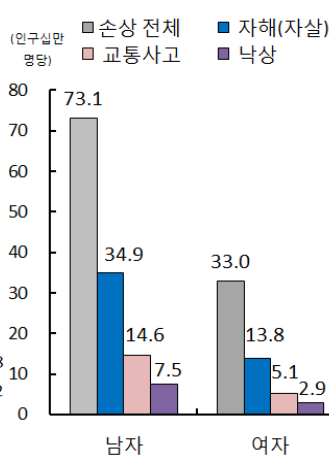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주된 손상 사망인 자살의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에서 가장 높음

-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9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인구 10만 명당 15.6명에서 2017년 9.8명으로 감소함
- 자살은 한국인의 손상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손상 중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에서 가장 높음(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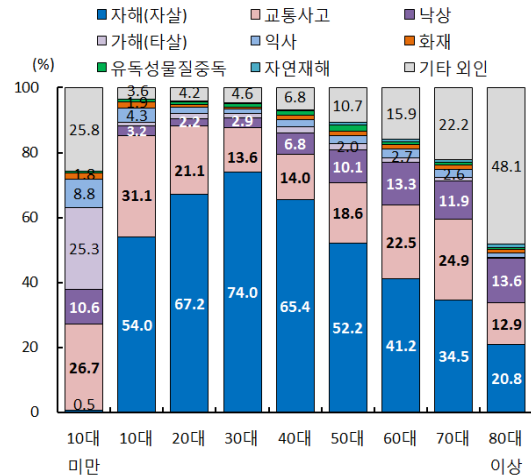
손상 원인별 사망률, 2007-2017



성별 손상 사망률,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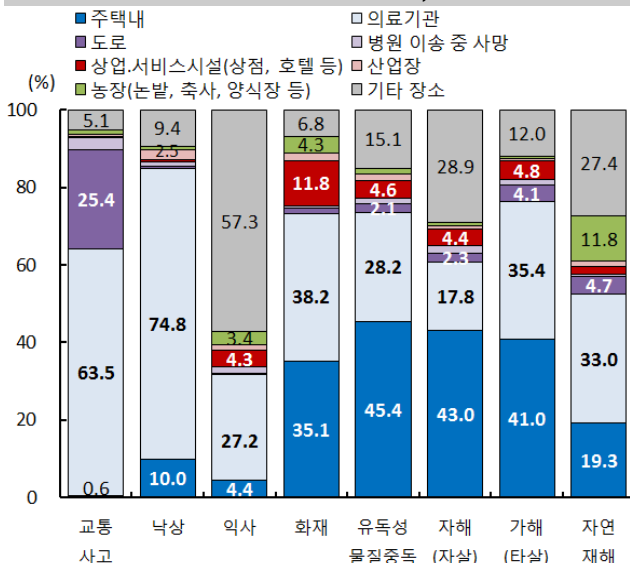
연령집단별 손상 사망 구성비, 2017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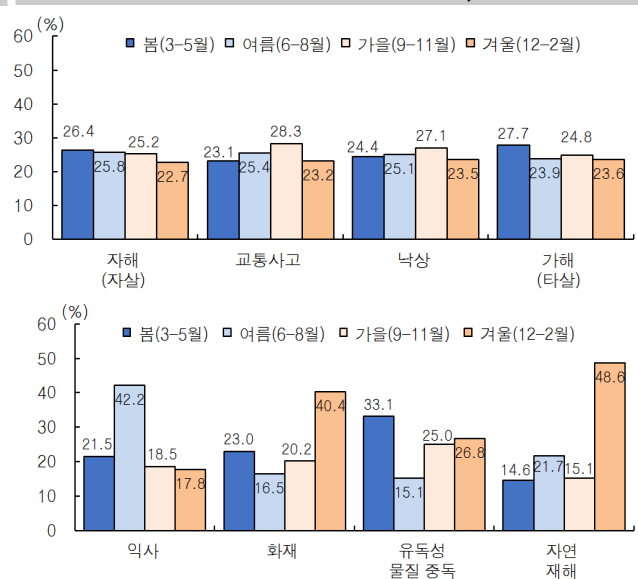
- 사망 장소 구성비 중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45%), 자살(43%), 타살(41%)이며 주택이나 의료기관 외에 상업, 서비스 시설의 발생이 높은 손상은 화재(12%), 타살(4.8%)임
- 사망 발생 시기 비율 중 봄이 가장 큰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33%), 타살(28%), 자살(26%)이며 가을이 가장 큰 손상은 교통사고(28%), 낙상(27%)임

장소별 손상 사망 구성비, 2017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 2017.

손상 사망 원인별 발생 시기(계절), 2017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 2017.

- 연구용역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연구 총괄책임: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 영역별 집필자

영역	집필자
인구	김두섭(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유정균(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가구	한경혜(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차승은(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손승영(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건강	조병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	김경근(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동	권현지(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홍준(한국노동연구원)
소득과 소비	박정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문화와 여가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이주현(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김진(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주거와 교통	장수은(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동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준형(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환경	김종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성길(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팀) 박준건(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팀) 박미옥(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팀) 이희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전	박두용(안전보건공단) 탁양주(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회통합	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